

企劃論文

# 통일지향 민족주의의 정치사상

## — 해방 후 중도우파 세력의 통일국가 수립노선을 중심으로 —

정 영 훈\*

I. 머리말	V. 화합·공존의 정치윤리와 민족자주론
II. 해방 후의 통일운동과 중도우파	VI. 중도우파 사상의 성격과 의의
III. 민족가치의 최고성	VII. 맺음말
IV. 초계급적 통일민족국가론	

### I. 머리말

이 논문은 해방 후의 중도와 정치세력 중에서도 특히 중도우파진영이 가지고 있던 정치사상을 통일지향적 민족주의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중도우파는, 범우익진영의 일원으로 분류됐으면서도 좌우합작운동과 남북협상에 참여한 우익세력을 가리키며, 사상적으로는 민족중심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사회주의적 정책대안을 수용했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해방 후의 한국정치사는 공산국가건설과 반공국가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비타협적으로 치달은 극좌·극우 세력과, 양자의 대결은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결과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하에 이념과 계급을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촉구하면서 통일운동에 나섰던 중도세력들 사이의 대립 구도 속에 전개되었는데, 중도세력은 다시 계급을 궁극개념으로 보는 사회주의적 세계관을 견지하면서 민전이라는 범사회주의권 연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한국정치사상 전공

대망 속에 참여했던 중도좌파와, 반공·반좌익을 공통분모로 하여 민주의원이라는 범우파연대기구에 참여하였던 중도우파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중도우파 진영의 주요 지도자로는 김구·김규식·조소앙·안재홍 같은 이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조소앙과 안재홍이 제시한 삼균주의나 신민족주의 같은 이론은 통일전선 또는 통일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중도우파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치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목에서 사용한 통일지향 민족주의란, 민족주의 현상의 다양한 전개양상이나 국면 중에서도 특히 통일문제를 우선과제로 삼고 전개된 운동흐름을 지칭한 표현이다.<sup>1)</sup> 민족사회를 단일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문제는 민족주의 일반이 추구하는 기본목표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민족사회 내부가 이런저런 요인으로 인하여 분열되어 갈등이 심각한 사회의 경우는 이 통일문제가 우선적 과업으로 떠오르기 마련이며, 또 이같은 과제에 충실한 운동 흐름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통일민족주의라는 말은 특히 삼일운동 후, 1920년대부터 40년대 사이에 전개된 민족통일운동의 정치노선을 잘 특징화시켜 줄 수 있는 표현이라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해방 후의 중도우파는 민족적 대단결의 명제 하에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을 추진하는

---

1) 민족주의를 흔히 민족의 자주독립과 발전·통일을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적 운동이라 이해하지만, 그러나 민족주의가 추구하고 쾰름하는 목표 가치나 과제는 다양하기 마련이다. 자주성을 위한 대외적 저항(반제투쟁)이 우선시될 수도 있고, 대내적 발전(민주화나 경제발전)이 당면과제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사상적·계급적·지역적 분열을 통합해내는 문제가 우선될 수도 있다. 통일문제 역시 주변 여건이나 내부 환경에 따라, 또는 운동주체의 성격에 따라 그 제기되는 양상이나 접근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민족주의 현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양상을 목표 가치나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구분하고 비교 설명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 같으며, 따라서 통일민족주의나 통일지향 민족주의와 같은 용어도 아직 학술용어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통일문제가 한국민족주의가 쾰름해온 주요 주제였고 또 통일운동에 몰두하였던 흐름이 있다는데 주목하여 일부 학자들이 상기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그 개념화 작업은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통일문제는 Nation-building이나 National identity 문제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주제인 바, 역사상 존재했던 다양한 민족주의 흐름들이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양상들을 비교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 논문은 말하자면 한국의 해방 후 중도우파에서 찾아지는 통일지향 민족주의의 양상을 사상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보고서인 셈이다. 필자는 통일민족주의라는 개념에 상응하여 근대화민족주의나 반제(저항)민족주의 같은 용어들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통일민족주의라는 개념은 통일문제를 우선과제로 삼고 전개된 민족주의 흐름이라는 좁은 의미를 넘어서, 민족주의의 범주 속에 포함되는 다양한 현상·지향·관심사들 중에서도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된 측면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등 민족의 분열과 분단을 막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민족 국가를 성사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사상적 대안까지도 제시함으로써, 통일지향 민족주의의 한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생각이다.

이 논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문제는 이들 중도우파 세력이 갖고 있던 정치세계와 관련된 생각과 구상들이다. 과연 어떤 세계관과 정치사상이 중도우파를 통일운동에 나서게 하였는지 하는 것과, 그들은 어떤 아이디어나 대안을 가지고 통일을 이루려 하였는지, 바람직한 국가질서와 정치윤리는 어떤 것이라 보았는지 하는 것들이 주요 분석 대상이 되겠다. 연구에서는 특히 이들이 갖고 있던 민족중심적 세계관과 초계급적인 국가구상, 그리고 화합을 강조하는 정치윤리론과 외세에의 의존을 거부하는 민족자주론을 중심으로 하여 살피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들 네 측면이 중도우파의 정치사상을 다른 정파들의 그것과 가장 잘 구분하게 해주는 대목들이라 생각하며, 현대적 안목에서 보더라도 주는 의미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도우파가 제기했던 정치사상은 한국정치사상사 전체를 통해 보더라도 가장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다. 물론 그동안에도 중도와 인사들의 사상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이들 중도와 사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들을 찾아내고 특히 당시의 좌우익 및 중도좌파들과 비교 속에 그 차이점과 특수성을 드러내주는 데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미진한 부분들을 보강함으로써 한국정치사 및 사상사의 체계화에 일조하고 민족통합이라는 미완의 과제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준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도우파 진영의 주요 지도자들과 단체들이 남긴 저술과 문건들 및 그들의 행적을 증언한 각종 기록물들을 중심으로 하여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 II. 해방 후의 통일운동과 중도우파

### 1. 좌우대립의 심화와 통일운동

해방 후 한민족에게 부과된 최대의 과제는 한반도를 분할하여 점령하고 있는

외세(미·소)의 영향력을 극소화시키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이념적 지향을 갖고 있는 제 정치세력의 입장을 절충하여 통일된 민족국가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민족의 이름 밑에 이념과 계급·파벌을 초월하여 대단결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나 기대와는 달리 삼일운동 후 민족사회를 분열시켰던 좌우대립은 해방 후 통일과 단결이 요구되던 시기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공화국’ 성립(1945. 9. 6)과정에서부터 표출되기 시작한 좌우파간의 견제의식은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문제를 둘러싼 찬탁·반탁 투쟁과정에서 한층 고조되었고, 정국은 점차 우익의 민주의원(1946. 2. 14)과 좌익의 민전(1946. 2. 15)으로 양분되며 좌우익간의 대결구도가 심화되어 갔다.<sup>2)</sup>

좌우대결이 심화되면서,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면 민족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이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또한 커져갔다. 그리고 좌우익의 대결장에서 한걸음 비켜나있던 중도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국의 분열을 해소해서 단일의 민족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자각이 고조되었다. 그같은 우려와 관심에 부응하여 시작된 것이 바로 1946년의 좌우합작운동이었다. 물론 좌우합작운동에 무게가 실리게 됐던 것은, 미소공위를 통해서 친미적 통일정부를 구성하려던 미국정부의 정책의도에 따라 미군정이 극단세력들을 배제하고 중도온건세력들을 지원하기 시작한 데에서 기인된바 컸지만, 그러나 그 사상적·정신적인 배경은 보다 멀리 1920년대 이래의 민족유일당운동·통일전선운동 이래 계승돼온 것이었다.<sup>3)</sup>

2) 민주의원은, 공산주의자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군정의 의도와 미군정에 협조하여 과도정부를 추진하려던 우익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결성된 협의기구였다. 미군정에 대한 자문기구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이승만의 독촉세력과 김구의 임정 우익을 비롯한 우익진영 지도자들 대부분이 참여했다. 의장에는 이승만, 부의장에는 김구와 김규식이 취임하였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은 민주의원 이 개회한 하루 뒤에 범좌익의 연합기구로 결성되었는데, 박헌영의 공산당과 여운형의 인민당 및 김원봉·김성숙·장건상·성주식 등 임정 내의 좌익인사들이 중심되었으며, 창립 당시 의장단으로는 여운형·박헌영·허헌·김원봉·백남준 등이 선출되었다. 민전의 주도권은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좌익3당 통합 후에는 남로당의 외곽기구로 활동하였다

3) 좌우합작운동은 신간회(1927)이래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이었다. 1920년대 중반 이래의 좌우분열을 통합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민족유일당운동은 1927년 국내에서 신간회가 결성됨으로써 성사되었으며, 신간회 붕괴 후에도 민족혁명당(1935)과 전국연합전선협회(1939) 같은 좌우합작기구를 거쳐 1942년에는 중경으로 옮겨간 임시정부에서 좌우합작이 이루어졌다. 임정의 좌우합작은 광복과 함께 붕괴되었지만 좌우합작·통일전선결성의 요구는 좌우대립이

우익측에서 김규식이 중심이 되고 좌익측에서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본격화한 좌우합작운동은 좌우익의 온건 인사를 중심으로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1946. 7. 10)됨으로써 본격화하였다.<sup>4)</sup> 그리고 다소간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좌우합작7원칙을 합의하는(1946. 10. 7) 데까지는 진전되었다.<sup>5)</sup> 그러나 그같은 합작정신과 원칙은 좌우익세력의 거부로 빛을 보지 못하였다. 좌우익 세력은 합작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개혁방안과 탁치문제·친일파처리문제 등을 둘러싸고 종래의 입장을 양보하지 않았고, 통일정권수립보다는 자기진영의 입장과 이익을 관철하는 데에만 몰두하였던 것이다. 거기에 미소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미소공위도 결렬되었고, 그에 따라 미소공위를 통한 임시정부수립을 모색하였던 좌우합작운동도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여운형이나 백남운 같은 중도좌파도 남로당이 주도하는 극좌노선에 휩쓸린 채, 독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합작대열에서 이탈하였다. 좌우합작운동은 중도좌파부터 결속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각시켜서, 민족자주연맹(47. 12. 20)이라는 중도좌파연합기구를 탄생시키는 것으로 종결되었다.<sup>6)</sup>

한반도의 남북을 점령하고 있는 미소의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미소공위가 실패하고 민족내부의 좌우합작도 실패로 돌아가자 두개의 정부로의 분단이 점차 가

심화될수록 제고되었다. 해방 후 좌우합작·통일전선이 거론된 것은 이미 건준확대개편문이 나오던 무렵부터인데, 인민공화국과 한민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정당들이 난립하게 되자 정당합동위원회·정당통일기성회·통일정권촉성회 같은 이름의 통일촉진기구가 결성되어 ‘명일에 닥쳐올 참화를 각성시키면서 ‘주의·사상을 초월한 대단결’을 촉구했다(국사편찬위원회편 『자료대한민국사』1, 116~117쪽).

- 4) 우측대표로는 김규식·김봉준·최동오·원세훈·안재홍 등 5인이, 좌측대표로는 여운형·허헌·이강국·성주식 등 5인이 각각 인선되었다. 우측대표로 참여한 사람은 대표적인 중도우파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좌측대표의 경우는 초기에 참여한 이강국·허헌·성주식 등 극좌파가 곧바로 이탈하고 장건상·여운홍·백남운·김성숙·장권 등 온건좌익인사로 대체되게 된다.
- 5) 좌우합작7원칙은 (1)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에 입각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공위의 재개를 요청할 것, (3) 유조건물수·채감매상·무상분여의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중요산업은 국유화할 것 (4) 친일파 민족반역자 처리를 위한 조례를 합작위에서 제안하여 입법기구에서 심의·결정·실시케 할 것, (5) 남북에서 검거된 정치운동자를 석방하고 일체의 테러적 행동을 금할 것, (6) 입법기구는 합작위에서 그 기능과 구성방법 등을 작성하여 실행시킬 것, (7) 전국적으로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 등 자유를 절대 보장할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국사편찬위원회편 『자료대한민국사』3권 468쪽 참조).
- 6) 민족자주연맹은 기존의 중도좌파 진영 내 연합기구인 미소공위대책위원회·민주주의독립전선·시국대책위원회 및 좌우합작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소시키고 범중도좌파적 통일기구로서 결성되었다.

시화되어갔다. 남북에서 미소에 각기 의존하는 극우·극좌세력들이 단독정권을 세우기 위한 행보를 빨리 해 가자, 중도 민족주의자들은 남북 분단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같은 위기의식은 분단을 막기 위한 최후의 시도로서, “가능·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可爲·不可爲의 당위론”<sup>7)</sup>에 입각하여 남북협상을 추진하게 하였다.

1948년의 남북협상론은 김규식을 중심한 중도파연합기구인 민족자유연맹과 김구·조소앙 중심의 한독당이 주도적으로 제기하였으며, 민족적 통일단결론에 공명하는 민족주의적 중도세력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제의를 남쪽의 두 지도자와 중도파 인사들이 북행하여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대표자연석회의(1948. 4)에 참석하는 데까지 진전되었다.<sup>8)</sup>

그러나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만나서 과거의 구원은 잊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통일을 이루자는 중도파 지도자들의 의도는, 분단을 돌려놓을 수 있는 아무런 전기도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남한의 단정론자들은 남북협상에 개의치 않고 남쪽에 반소·반공의 단독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일정을 진행시켜가고 있었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역시 자기들이 진전시켜온 공산정권수립작업을 포기하고 통일을 위한 대타협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좌우합작·남북협상으로 대표되는 해방 후 중도파의 통일운동은, 국제적으로 미소간에 냉전이 강화되어 가는 가운데, 극좌·극우의 세력들이 비협조로 일관한 데다 중도파 역시 그같은 장애요인들을 극복할 역량을 동원하지 못했던 관계로, 분단과 전쟁을 향해 줄달음쳐가던 대세를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내지는 못

7) 『문화인 108인의 남북협상 지지성명』, 1948. 4. 14.

8) 남북협상은 1947초부터 중도파인사들에 의해 제안되어 왔었는데, 1948년의 남북협상은 1948년 2월 김구·김규식이 북한의 김일성·김두봉에게 남북정치지도자간에 정치협상을 통하여 통일정부 수립과 새로운 민주국가 건설에 관한 방안을 토의하자는 요지의 서신을 보내고, 그에 대해 3월에 북측이 ‘남북조선 소범위 지도자연석회의 를 소집할 것에 동의한다는 답신을 보냄으로써 구체화하였으며, 그해 4월 김구·김규식 등 남측대표들이 북행하여 북측 인사들과 회담하는 것으로 진전되었다. 그러나 남측의 김구·김규식 등은 남북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민족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요인회담을 기대하였지만 북측은 남북대표자연석회의라는 이름하에 거의 일방적인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48년의 남북협상은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의 경과 및 평가에 대해서는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서울대출판부, 1997), 199-290쪽 참조.

하였다. 그러나 중도파의 그같은 노력들은 자주독립과 통일·단결을 향한 민족적 의지를 천명한 데에 뜻이 있다.

## 2. 해방 후의 중도우파

해방 후의 정치세력을 분류하는 방법은 보는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필자는 공산혁명과 반공주의를 앞세워서 극단적인 대결을 전개하던 양측을 극좌와 극우로 분류하고, 그들 사이에서 양자의 대립을 완화시키고 합작과 통일을 이루어 내려던 세력을 중도파로 보는 3분법이 유용할 것이라 본다.<sup>9)</sup> 필자는 해방 후의 민족주의는 민족이나 계급이나, 민족주의나 국제주의나 하는 관념적 수준에서의 논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족상잔의 전쟁을 막고 화합과 통일을 추구하는 윤리성으로 표현되었어야 했다고 본다. 광복 후의 정국에서 우익이 갖고 있던 이데올로기의 공통분모는 민족주의라기보다 반공주의라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기준 하에 당시의 정치세력을 분류해보면, 좌측끝과 우측끝에 독선적인 공산주의와 배타적인 반공주의를 배치할 수 있을 것이고, 민족주의는 양자 간의 극단적 대립을 지양시키고 통일을 이루어내려는 이데올로기로서 좌우의 중간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좌익은 삼일운동 후의 정치사를 좌우로 분열시킨 장본인이었다. 처음에는 마스주의를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수용하였지만, 점차 마스레닌주의의 이론적 틀 안에서만 현실을 이해하고 혁명의 전략을 수립하며 민족문제를 보는 가운데, 국제공산주의의 지휘 하에 움직이게 되었다. 좌익의 편협성과 급진성은 그의 강도만큼 반대세력의 반작용을 유발하였고 강하게 결속시켜갔다. 한편 당시의 반공·우익진영 속에는 공산주의자들이 혁명대상으로 지목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하고 있었다.

9) 냉전시대를 통해서는 공산주의자들을 좌익이라 분류하고 그 반대진영을 민족진영이라 부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이같은 분류방식에는 반공적 우익의 입장을 민족적인 것으로 강변하려는 일정한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민족주의의 개념을 둘러싸고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좌익은 친일유산을 철저히 제거하고 착취계급 및 미제국주의로부터 다수 민중을 해방시키려던 자신의 입장이 가장 민족적이었다고 강변할 것이며, 우익은 공산주의자들의 계급주의적이고 국제주의적인 폭력혁명 위협으로부터 남쪽만이라도 지켜낸 자신들이야말로 민족주의라 주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친일경력자들도 있었고, 지주·자산가도 있었으며, 구미쪽의 자유주의적 교양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공산주의의 계급주의·국제주의이론에 막연한 저항감을 갖는 관념적 민족주의자들도 있었다.<sup>10)</sup>

좌익과 우익은 민주주의에는 미국식과 소련식의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보고, 좌익은 소련식만을, 그리고 우익은 미국식만을 정의롭고 합리적이라 강조하였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기만적이고 반동적이라 공격하였다.<sup>11)</sup> 좌우익은 또 타협과 양보를 배척하였으며, 자기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합법적·급진적인 방법도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였다.<sup>12)</sup> 좌우익의 급진주의나 편협성은 필경 정국을 양보하고 공존하는 가운데 통일을 도모하는 쪽으로 보다는, 대결과 상쟁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이같은 동향들은 중도파를 안타깝고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중도파가 통일운동에 나선 직접적 배경이 되었다

해방 후의 중도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또는 사회주의혁명에 대한 입장 여하에 따라 중도우파와 중도좌파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도우파는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을 지지한 세력들 가운데서도, 특히 민족중심적 세계관에 토대하여 사회주의적 정책대안을 흡수해간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공산주의 사회를 최종 목표로 상정하는 2단계 혁명론을 개진한 중도좌파와 달리 민주사회주의적 지향의 초계급적 통일민족국가를 최종적 목표로 제시하였다.

좌우합작운동 단계의 중도우파 진영을 대표한 인물로는 좌우합작위원회에 우측

10) 극좌파에는 박헌영을 중심한 남로당(1946. 11) 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극우파에는 송진우·김성수 등을 중심으로 한 한민당(1945. 9)과 이승만을 추종한 독립촉성국민회(1945. 12)를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도좌파에는 여운형 중심의 인민당·사회노동당·근로인민당으로 결집해온 그룹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11) 극좌·극우의 대표자적인 박헌영과 이승만의 견해가 그러하였다. 두 사람은 미국식 민주주의와 소련식 민주주의 사이의 중간적 선택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박헌영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8월테제); 우남실록편찬위원회 편, 『우남실록 1945~1948』, 자료편 열화당 1976), 461, 466쪽.

12) 박헌영은 목적은 수단을 합리화한다는 막시즘의 명제를 신봉하여 폭력 투쟁의 모험주의로 나아갔으며, 이승만도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력 사용도 불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박헌영이 46년 여름에 ‘신진술’이라는 이름의 폭력적 투쟁노선을 본격화한 것이나 이승만이 좌익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합리화하고 뒷날 무력 사용을 불사한 북진통일을 외쳤던 것은 이같은 사고방식의 산물이었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영훈 「이승만과 박헌영 해방후 신국가건설의 논리」, 정윤재 외, 『한국정치사상의 비교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참조



대표로 참여한 김규식·안재홍·원세훈·최동오·김봉준 등을 들 수 있다. 이 단계의 중도우파진영은 대개 다음의 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는 좌경화되어 가던 건준에서 이탈한 안재홍을 중심한 그룹이었다. 안재홍은 1927년 최초로 결성된 좌우합작의 민족통일전선기구였던 신간회에 참여한 이래 일제기를 통해서는 비타협적 투쟁노선을 걸었으며, 해방 후에는 신민족주의 정치이론을 내놓고 박용희·명제세 등과 함께 국민당을 결성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임정의 일원으로 환국하였지만 김구가 주도하는 임정법통론과 비현실적 반탁노선에 반대하여 임정에서 이탈한 김규식·유동열·김봉준·최동오 등이다. 김규식은 1935년 중국에서 좌우합작정당으로 출범했던 민족혁명당의 대표였고, 임정요인으로 환국한 뒤에는 김구의 반탁노선과 거리를 두고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하여 좌우합작위원회의 우측 영수로 활약하였다. 세 번째 그룹은 한민당에 참여했다가 그 보수성에 실망하고 이탈하여 좌우합작운동에 참여한 원세훈·김병로·김약수·송남헌 같은 인사들이다.

중도우파 세력이 항상 단일의 집단에 통합되어 움직였던 것은 아니다. 중도우파 인사들은 서로간의 이념적·인적 친밀성과 연고에 토대하여 결속했다가도 해방정국의 구체적 이슈들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기도 하였는데, 1947년 10월에 민주통일당·신한국민당·신진당·민중동맹·건민회 등 5당이 통합하여 결성했던 민주독립당(1947. 10)이나, 여운형이 암살되고 좌우합작위원회가 해체된 후 김규식을 주석으로 하여 범중도파 연합기구로 조직됐던 민족자주연맹(1947. 12) 등은, 중도좌파적 색채가 많이 탈색된 중도우파 성향의 정치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안재홍이 제기한 신민족주의나 민족자주연맹이 표방했던 ‘조선적 민주주의’는 중도우파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지향을 잘 대변해주는 말이라 할 수 있다<sup>13)</sup>

민족자주연맹과 함께 남북협상의 남측 주역의 한편이었던 김구·조소앙 등의 한독당 그룹도 중도우파의 다른 한 축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구는 임정법통론에 집착하여 좌우합작운동에 소극적이었지만 좌우합작 자체에 대해서는 지지를 아끼지 않았고, 합작7원칙에 대해서도 극우 한민당과는 달리 찬성하였다<sup>14)</sup>

13) 안재홍은 일제하 최초의 좌우합작 통일전선이었던 신간회(1927)를 주도하였고 해방 후에는 좌우합작운동의 중심인물로 활약하였다. 그의 신민족주의론은 중도파의 유력정당의 하나였던 국민당의 지도이념이었다.

조소앙 역시 중도우파진영의 이론가였는데, 그가 제기한 삼균주의는 1935년 해외의 좌우익 세력을 망라하여 결성된 민족혁명당의 지도이념으로 채택된 이래, 1940년대 좌우합작적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으로 기능하기도 했던 대표적인 통일전선 이론으로서, 해방 후에는 한독당의 지도이념이었다

### III. 민족가치의 최고성

#### 1. 민족의 영속성과 최고성

중도우파세력의 정치사상에서 하나의 세계관적 토대를 이루는 것은 민족을 다룬 어떤 가치보다 우월한 가치로 상정하는 민족주의적 관점이다. 그들에게 있어 민족은 개인이나 계급·파벌의 이해를 초월하는 최고 지상의 가치였으며, 세계·인류라는 가치보다도 우월한 것이었다. 그들은 어떤 이데올로기도 민족을 초월해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계급적 이해관계를 민족에 앞세우는 좌우파의 이데올로기를 배척하였다. 민족에 대한 이같은 관점은 통일전선·좌우합작·남북협상에 참여했던 세력들 가운데서도 중도우파를 판별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할 수 있다. 중도좌파는 민족의 자주독립과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계급중심 세계관으로의 사회주의를 보편과학으로 생각하였고, 민족·민족주의에 대해서는 한시적 의미만 인정하는 차이를 보인다.<sup>15)</sup>

중도우파는 민족을 단순한 ‘상상된 공동체’<sup>16)</sup>로 보는 것을 반대하고, 역사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체적 실체로 이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재홍은 ‘핏줄은 본능적으로 켜기는 것 이고 핏줄에서 시작한 민족의식 또한 본능적인 것 이라 말하고, 민족은 국제주의와 같은 관념적 조작에 의해 부인·말살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sup>17)</sup> 같은 관점에서 김구도, “철학도 변하고 정치 경제의 학설도 일시

14) 『동아일보』 1946년 10월 15일자.

15) 정영훈, 「광복후 중도좌파의 정치사상」, 『정신문화연구』 제21 권 제 4호(1998).

16) B.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17) 안재홍,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민세안재홍선집』2(지식산업사, 1983), 20-24 쪽 그는 소련

적이지만 민족의 혈통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소위 좌우익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sup>18)</sup>

중도좌파가 활동하던 당시의 정치사상적 갈등의 핵심적인 것은 민족과 계급 중 어떤 것이 우선적 가치냐 하는 것이었다. 특히 좌익이 신봉하는 막시즘은 민족을 부르주아 계급의 허위의식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막시스트로 출발하여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에 접근해 온 중도좌파도 민족주의를 장차 도래할 사회혁명 단계에서는 소멸해버릴 한시적 이념으로 생각한다.<sup>19)</sup> 그러나 중도우파는 계급을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로 보는 데에 반대한다. 물론 그들은, 계급적 불평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면서 민족을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같은 계급적 갈등요인은 민족애가 발휘됨으로써 완화될 수 있고, 초계급적 정책처방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중도우파세력은 민족을 세계사의 불가피한 기본단위로 생각하였고, 특정 강대민족이 다른 민족을 침략하거나 약소민족의 생존권을 짓밟는 일이 없이 민족 간에 평화롭게 공존 공영하는 세계일가·인류대동의 세상을 궁극목표로 상정하였다. 물론 그 세계일가와 인류대동의 세상에서도 민족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본다. 가령 조소앙은 세계구성의 기본단위는 민족국가이고, 민족과 국가를 부정하고는 세계를 긍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그의 삼균주의가 지향하는 세계일가론은 우리민족과 그 국가의 독립과 생존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었다.<sup>20)</sup> 안재홍도 세계가 전인류의 대동평화를 지향해 가야 하는 것은 하나의 당위이지만, 인류가 생존하는 한 민족주의는 존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특히 세계평화와 인류대동의 시대를 여는 과제와 관련하여 민족주의가 하나의 혁명적 요소로 기여할 것이라 천명하였다.<sup>21)</sup> 김구도 사해동포주의가 인류의 최고·최후의 희망이지만, 그것은 멀고먼 장래에 바랄 것이요 현실의 일은 아니라고 단언하면서,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어 최선의 문화를 낳아갈려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라 규정하였다.<sup>22)</sup>

---

도 실은 ‘소비에트민족주의에 의해 움직여왔다고 설파한다

18) 김구, 「나의 소원」, 『백범일지』(서문당 1973), 317 쪽

19) 배성룡, 『자주조선의 지향』(광문사 1948); 백남운, 『조선민족의 진로』(신진사 1945).

20) 조소앙, 「한국독립당 당의해석」, 『소앙선생문집』상(햇불사 1979), 222 쪽

21) 안재홍,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민세안재홍선집2』, 22~23 쪽

중도우파가 민족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긴 하였지만, 그들은 자민족의 이익만을 지상시하면서 폐쇄적이고 침략적인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한다. 인류대동과 세계일가의 상태를 이상적 세계질서로 상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류대동의 과제는 개개 민족의 민족적 자주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체로 하는 것이었다. 특히 한민족이 자주독립하는 것은 그 필수조건이었다. 중도민족세력들은 약소민족의 권리가 인정되는 가운데 평등과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조하는 세계를 추구하였으며, 우리 민족이 그같은 이상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 2. 공동운명체로의 민족

중도우파 인사들은 민족전체가 하나의 자주적 주권국가 밑에 통합되어 번영을 누리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였고, 민족국가 안에서 개개인들이 소외됨이 없이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들은 민족을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간주한다. 한민족은 흔히 동일한 혈연 배경 하에 반만년간 운명을 같이 해온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이해되었으며, 자주 ‘단군의 자손’이자 ‘단일민족’이라 지칭되었다. 중도우파 인사들 사이에는 ‘단군민족주의’라 부를 수 있는 민족인식이 폭넓게 공유되어 있었다. ‘단군민족주의’는 단군을 민족의 공동연원으로 생각하고 단군의 자손, 단일민족으로의 민족정체인식 아래에서 민족의 통합과 발전을 추구하던 일련의 사상·의식·운동을 가리키는데,<sup>23)</sup> 특히 중도우파 인사들 중에는 이 단군

22) 김구, 「나의 소원」, 『백범일지』.

23) 단군민족주의는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이전으로까지 소급되는 오랜 뿌리를 갖고 있는 사상·인식흐름으로서, 한국사를 통하여 민족적 자주성과 독자성을 고취시켜온 중요한 동력으로 기능해왔다. 중세기를 통해서는 사대모화사상에 눌려서 약화되었지만 한말에 외서는 신채호 등 국학자들과 대종교 등 민족종교의 노력으로 대중적으로 보급되게 된다. 이 단군의 자손 단일민족론은 한말 이후 대중화되면서 민족적 공동운명론을 보급해왔으며, 이는 다시 민족이 통일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해왔다. 단군민족주의는 한민족이 민족적으로 자각된 근대적 민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중요하게 관여했고 외세에 대한 독립운동과정에서 그 투쟁에너지를 형성하는데도 기여했었다. 한말 이후의 그것은 국민주의적 정치의식과 결합하면서 정치의식의 근대화에도 기여하였고, 통일전선운동기에는 통일의 당위성과 가능성의 명분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민족운동과 밀접한 연결을 맺고 있었다. 해방 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뒤 개천절이 국경일로 지정되고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으로 제정되며 단기연호가 정부의 공식연호로 채택되었던 것 등은 이 단군

민족주의 흐름과 밀접히 교류하면서 민족의식을 발전시켰고 나아가 스스로 단군민족주의 의식을 보급하는데 주역으로서 활동한 이들이 적지 않다.<sup>24)</sup>

이 단군민족주의는 단순히 단군의 자손·단일민족으로의 민족적 정체성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민족이 통일되어야 하고 또 통일될 수 있는 당위성과 가능성의 근거로까지 발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가령 김구가 임시정부 개선 환영식 답사에서 “우리민족 개개인의 혈관 속에는 다같이 단군성조의 성혈이 흐르고 있으므로” 남과 북, 좌익과 우익이 단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이냐,<sup>25)</sup> 남북협상의 성공을 기원하는 「문화인 108인 성명」에서 우리민족이 원래부터 “공동사회체의 단일민족으로서 고락을 같이 하며 한개의 생활을 영위해왔음”을 강조하면서 남북통일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천명한 것<sup>26)</sup> 등은 그 한 예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군민족주의는 단군의 자손의식과 반만년역사·홍익인간·백두산·개천절 같은 민족적 동질성과 자주성·유구성 등을 상징하는 용어와 인식들을 보급하였는데, 중도파인사들은 이 단군민족주의의 상징과 인식들을 폭넓게 공유하고 단군의 자손·단일민족론을 민족적 동질성과 공동운명성으로 연결시키면서 이를 통일의 당위성과 가능성의 근거로서 자주 거론하고 있음을 본다.

뒤에 말할 중도우파의 초계급적 국가론은 이 민족적 차원에서의 공동운명체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 공동운명체론은 장차 건설할 사회와 국가도 공동운명이 가능하도록 ‘동일운명사회’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sup>27)</sup> 한편 앞에서 중도우파 인사들이 세계를 민족 간에 경쟁하는 약육강식

민족주의가 국가 의례 속에 제도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군민족주의 현상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1) 정영훈, 「단군과 근대한국 민족운동」, 『한국의 정치와 경제』 8집(1995), (2) 정영훈, 「근대 한국에서의 단군민족주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집(2001), (3) 정영훈, 「단군민족주의의 前史」, 『단군학연구』 8 호(2003).

24) 단군민족주의의 대표적 흐름이 단군을 국조이자 천신으로 숭앙하던 대중교라 할 수 있는데, 중도파 지도자중 안재홍이나 명제세·윤기섭·조완구·이극로 등이 대중교인이었다. 김구도 스스로를 대중교인이라 소개했었다. 조소앙은 1912년이래 대중교와 밀접히 교섭하면서 민족의식을 심화시켰었다. 안재홍은 “승엄한 단군성적을 호유선전하야 민족정신을 양양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檀君聖蹟護維會의 이사장이었으며, 이 단체의 이사진에는 조소앙과 신익희 같은 인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의 중도파 단군민족주의자들은 6.25 전쟁과정에서 남북되어 정치무대에서 사라졌다.

25) 백범사상연구소 편, 『백범어록』(서문당, 1973), 54~55 쪽

26) 『세계일보』 1948년 4월 19일자.

의 현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세계에서의 최상의 덕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쟁에서의 승리와 생존을 위해서는 민족적 결속이 더욱 강조되기도 하였다.

중도우파의 민족주의에서는 민족을 그 자체 생명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면서 개인은 그 구성분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은 민족의 독립과 발전을 통하여 가능하며, 개인은 민족을 경유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세계로 나아간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은 민족집단에 대한 봉사를 최고의 의무이자 덕으로 간주하면서, 개인이나 파벌의 이익을 민족에 앞세우는 이기주의·분열주의에 반대한다. 중도우파의 운명공동체론은 당시 조선에는 계급 또는 지배계급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계급부재론 또는 지배계급부재론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들은 식민지 기간을 통하여 한민족은 전체적으로 피지배계급의 지위로 전락했다가 지배계급으로의 일체가 패망함과 함께 전민족적인 해방의 단계로 들어섰다고 본다. 이같은 관점은 조선에는 혁명대상으로의 지배계급과 혁명주체로의 피지배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전개되는데,<sup>28)</sup> 그같은 계급부재론은 좌익의 계급주의적 현실인식을 거부하는 것으로, 중도우파가 개진한 전민족적 대동단결론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민족을 최고 가치로 간주하는 중도우파세력은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당시 한민족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당면 과제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모순을 척결하기 위한 사회혁명의 문제는 민족적 자주독립과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완수된 뒤에 추구돼야 한다고 보았다.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문제를 우선시 하는 것은 중도우파에게 공통된 입장이었으며,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은 이같은 문제의식에 토대하여 추진되었다.

27) 안재홍,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민세안재홍선집』, 18 쪽 참조

28) 조소앙, 「한국독립당 당의해석」, 『소앙선생문집』상, 213쪽, 안재홍, 「국민당선언」, 『민세안재홍선집』2, 62~63쪽.

## IV. 초계급적 통일민족국가론

### 1. 국가조직의 원리

중도우파 정치사상에서 찾아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그들이 개진했던 초계급적 국가론이다. 광복 후의 중도민족세력은 민족적 대동단결을 위해 애국심이나 동포애·민족의식 같은 심정적 계기에만 호소하지는 않았다. 통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처방까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그들은 특정계급의 이익을 위한 국가가 아닌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정치와 국가를 지향하였다. 그를 안재홍은 만민개로·대중공생의 초계급적 통일민족국가라 불렀으며,<sup>29)</sup> 조소앙은 ‘全民的 민주주의’라는 말로 표현하였다.<sup>30)</sup> 그들이 독점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반대한 것은 이 이데올로기들이 민족전체가 아닌 특정 계급, 곧 유산계급과 무산계급만의 이익을 위한 사상이라고 믿은 때문이었다. 이들은 선진적 사회사상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를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취사선택한 정치이념을 추구하였으며, 제 계급의 이익과 그에 토대한 사상대립을 중도에서 화해시킬 수 있는 정치사상과 세력을 정립·형성하려 힘썼다.

중도세력들은 특히 불평등이 민족사회의 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을 중시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평등을 국가조직의 우선원리로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소앙은 ‘균등’을 민족과 인류의 행복을 실현함에 있어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초”라고까지 말한 바 있고,<sup>31)</sup>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이론의 골간을 이루는 ‘다사라 정신은 전인민 각계층을 ‘遺漏와 차등없이’ 다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sup>32)</sup> 김구도 장차 건설할 국가의 성격을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이라 천명하여 평등원칙을 강조하였다.<sup>33)</sup> 신민족주의사학을 창도한 사학자로 평가되는 손진태도 좌

29) 안재홍,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1945), 『민세안재홍선집2』, 15~63 쪽

30) 조소앙은 “민중을 우롱하는 자본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고 무산자독제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닌 汎한민족을 기반으로 하고 범한국민을 단위로 하는 全民的 데모크라시”라 표현한다(「한국독립당 당의해석」, 『소양선생문집』상(햇불사 1979), 218 쪽.

31) 「한국독립당 당의해석」, 『소양선생문집』상 207 쪽

32) 「국민당선언」, 『민세안재홍선집2』, 62 쪽

우합작과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등 중도우파적 지향을 갖고 있었다 할 수 있는데, 그는 신민족주의의 중심명제를 “단결하면 흥하고 분열되면 망한다. 균등하면 단결하고 불균등하면 분열된다”고 요약한 바 있다<sup>34)</sup> 이같은 인식 하에 중도우파 인사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영역에서 성원 모두에게 균등한 조건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중도우파가 제시하는 초계급적 국가의 모습은 중도좌파가 당면목표로 제시한 것들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으니 곧 중도우파가 제시한 초계급적 국가관은 그 자체 최종적 목표였지만 중도좌파의 경우는 과도적·임시적 형태이기 때문이다. 중도좌파는 통일국가를 하나의 중간적 단계로 보았고 궁극적으로는 ‘무계급사회’ 또는 ‘사회주의’를 최종적 목표로 상정하였다.<sup>35)</sup> 중도 좌·우파가 모두 좌우합작과 계급협조를 주장했지만 둘 사이의 협조·통일은 통일국가가 성립되는 대로 조만간 깨질 운명에 있는 것이었다. 미래에 대한 이같은 비전의 차이는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우익들에게는 하나의 잠재적 불안 요인이자 불신요인이 아닐 수 없었고, 이점은 중도파 연합에 내재한 취약점의 하나가 되었다.

중도우파세력의 초계급적 국가론이 가지는 특징 중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이 데올로기적 획일성에서 탈피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그 선택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크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특징의 입장을 고수·관철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애국적인 각계각층의 부동한 요구를 민주주의적으로 조화통일”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으며, 그를 위하여 ‘동포간의 친애정신’을 촉구하였다.<sup>36)</sup> 여기에서는 중도민족세력이 구상했던 통일민족국가의 제

33) 『동아일보』 1945. 12. 20, 『자료대한민국사』1, 629쪽

34) 손진태, 『조선민족사개론』(1948), 『손진태선생전집』1 권(태학사, 1981).

35) 백남운의 연합성 신민주주의론은 조선 현대사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자주독립을 위한 정치이념을 자처하였으나 소련식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일반민주주의’라 하여 사회발전의 최종적 지표로 인식하였으며(백남운, 『조선민족의 진로』(신건사, 1946)), 배성룡의 신행민주주의론에서도 조선실정에 맞는 범민족적 협동전선의 이론을 자처하였으나 사회주의사회를 최종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배성룡, 『자주조선의 지향』(광문사, 1949), 31쪽). 여운형도 ‘무계급사회’를 장차 나아가야 할 개혁방향으로 언급한 바 있다(『몽양여운형전집』1(한울 1991), 254 쪽).

36) 「민족자주연맹 규약·선언·강령·정책」, 한국안보교육협회편 『서울시인민위원회 정당사회단체 등록철』(1990), 772쪽 참조



조직원리들을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그들이 지향한 통일민족국가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 정체는 국민주권적 민주공화제였으며, 구 조선왕실이나 군주제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민의 자유보장을 중시하여, 성·교파·계급의 차별이 없이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신앙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동등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하였다. 특히 특정의 계급이나 개인에 의한 독재는 거부하였으며, 문제를 폭력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에도 반대하였다. 당연히 폭력혁명노선은 거부되며, 개혁은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점진적인 것이어야 했다. 이들의 정치관에서는 지방자치와 권력분산이 강조되고 있는 점도 특이한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다.

중도우파가 가지고 있던 이같은 정치방면의 구상은 반동적·친일적 요소의 청산을 주장하면서 의회주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권력집중제와<sup>37)</sup> 급진적 폭력노선을 채택한 극좌 조선공산당·남로당의 구상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었지만, 한민당 등 극우파세력이 내세운 공약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도우파 사상이 극우세력과 다른 진보성은 정치적 영역에서 보다는 경제제도 측면에서 더욱 부각되어진다 하겠다.

## 2. 초계급적 국가의 사회·경제정책

중도파가 모색한 경제정책의 대체적인 방향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장점을 흡수한 혼합경제체제였다 할 수 있다. 이들은 우선 소유제도에 있어서 사유제와 공유제를 혼합하여 능률과 평등을 조화시키려 하였다.<sup>38)</sup> 중도파는 경제적 불평등

37) 제2차 미소공위가 속개된 후 공위에 제출된 남노당과 민전측의 임시정부 조직 및 구성문제에 대한 답신안에 의하면, 남노당과 민전은 중앙정부의 구조와 관련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리를 제시한 우익과 중도진영의 의견과 달리, 내각에 입법권과 행정권을 집중시킨 강력한 통치 구조를 제시하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아무런 제한규정도 두지 않음으로써 절대권력화할 여지를 남겨두었다(심지연, 『미소공동위원회연구』(청계연구소, 1989), 91 쪽). 좌익의 이같은 구상은 공산주의의 민주적 중앙집중제 원칙에서 유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8) 초계급적 국가론은 사유재산을 인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용인하는 토대 위에 전개되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성격때문에 중도파는 극좌로부터 극우와 동류라 매도되었다

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키고 민족사회를 분열·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본의 과대집중을 방지하고 균등사회를 달성하는 것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의 활력과 생산성제고를 위해서는 균등의 요소와 함께 자유 내지 능력의 요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경제정책은 단순히 사유제와 국유제를 절충하려 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상반된 요소를 지양 종합한 이상적 모형을 찾는 데 유념하고 있었다.<sup>39)</sup>

그들은 공적 성격이 큰 부문은 국유화시키려 했고, 중소기업이나 개인생활에 필수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사유를 인정하되, 국가가 생산과 소비의 경제 전부문을 관리 조정하는 계획경제를 실시하려 하였다. 물론 중요산업과 대기업에 대한 국유화조치를 천명하고 계획경제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당시 모든 정치세력 사이에 공통적이었다.<sup>40)</sup> 그러나 극우파 한민당의 진정한 바램은 아무래도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기조로 삼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극좌파 남로당은 소기업에 대한 사유를 인정하는 이른바 인민경제제도를 주장하고 있었지만,<sup>41)</sup> 이러한 제한적 사유재산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완수되는 대로 조만간 폐지될 운명에 있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중도우파의 경제관은, 사유재산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자본의 집중과 불평등의 심화로까지 나가서는 안되며, 국민전체의 균등·복지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분명한 문제의식에 입각하고 있었다 할 수 있다.

당시 좌·우파간에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 있던 토지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좌익

39) 원세훈의 고려민주당(1946. 8. 18)이 “자유성과 계획성을 적당 부여”한 ‘진정한 사회민주주의 정권’ 건설을 표방한 것이니(송남현, 『시베리아의 투사: 원세훈』(천산산맥 1990), 245 쪽), 안재홍의 국민당이 만민개로·대중공영의 산업경제정책을 천명하면서 민간기업이 기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국영만능주의’는 피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안재홍, 『국민당 정강·정책 해설』, 『민세안재홍선집』2, 71 쪽), 중도우파의 그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도민족세력의 경제정책은, 가능한 한의 경쟁과 필요한 한의 계획을 지침으로 하는 독일사회민주당의 사회적 시장경제이론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40) 당시 남한 내의 우파까지도 중요산업의 국유화에 일치를 보였던 것은, 남한 내에는 별다른 대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좌파의 영향 하에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1946년 8월에 산업국유화조치가 취해졌다.

41) 남로당이 주장하는 인민경제제도는 중요산업은 국영으로 하고, 중산업에 대해서는 국영 또는 인민의 협동경영으로 운영하며, 소기업에 대해서만 개인의 창의적 경영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민전측의 무상몰수·무상분여라는 주장과 보수적 한민당의 유상매상·유상분배 주장을 절충하여, 유조건몰수·체감매상 등 방법으로 토지를 환수하여 농민에게 무상 또는 엽가로 분여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sup>42)</sup> 토지에 대한 그들의 기본정책은 국유제와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누진세제나 상속세제와 같은 조세제도를 통하여 빈부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민개로의 이상 하에 국민 모두가 노동을 통해서만 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 하였으며, 불로소득의 기회는 차단하려 하였다.

중도민족세력은 또한 국민 모두에게 물질적·정신적 차원에서 인간적 삶의 기초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복지국가를 지향하였다. 이들은 소외될 수 있는 약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강조하여 보건·양로·육영 등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 있는 노동자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에 유념하고 있는데, 8시간노동제나 최저임금제·노공보호법·유년노동금지 같은 노동입법도 제안되고 있고, 실업자 대책이나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도 구상되고 있다. 이들은 또한 국비에 의해 의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들이 제기하는 사회·경제정책들은 19세기 후반기 이래 서구 선진사회가 발전시켜온 복지국가의 그것과 많이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좌우익 정파들의 정책을 비교해보면 좌파 남로당의 그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노동자 중심적이라는 점<sup>43)</sup> 외에는 크게 차이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이 무렵 각 정파의 정책공약이 재정문제 등 현실적 가능성 문제는 고려치 않고,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끌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선진적 대안들을 망라하여 제시했던 데에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중도파가 제기하는 복지정책은 계층간 갈등해소나 민족적 통합이라는 절실한 문제의식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진실성이 더욱 돋보인다 할 수 있겠다.

42) 좌우합작7원칙(46. 10. 7) 참조 『동아일보』 1946. 10. 8; 국사편찬위원회 편, 『자료대한민국사』3, 468쪽.

43) 가령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의 경영참여권을 제기하고 반동적인 노동단체의 해산을 주장하고 있다.

## V. 화합·공존의 정치윤리와 민족자주론

### 1. 화합·공존의 정치윤리론

통일과제를 추구해감에 있어서 중도우파는 민족 내 세 세력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공존하는 화합의 윤리를 강조하였다. 그들이 이같은 윤리를 강조한 것은 한편으로는 혈연공동체·운명공동체로의 민족의식·동포애의 산물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을 위해서는 화합·공존의 윤리가 실천되어야 한다는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냉전적 분단은 동족상잔의 유혈대결을 결과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sup>44)</sup>

중도우파는 세력 간의 이데올로기상 차이나 이해관계상의 대립은 이같은 윤리에 기반하여 서로 절충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민족내부의 폭력을 반대한다. 그들은 외적에 대한 싸움에서는 비타협의 선명노선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민족내부의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좌우합작7원칙에서 일체의 테러적 행동을 금할 것을 촉구한 것이나, 민족자주연맹이 강령에서 “동포상호간에 친애정신을 발휘하여 일체의 종파적 아집과 독선적 태도를 버리고 무의미한 동족상잔의 행동을 근절하기에 노력할 것”<sup>45)</sup>이라 천명한 것은 같은 인식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김구가 분단으로 인하여 동족상잔의 참극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서로 적대하던 과거를 잊고 진지한 애국심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며 남북정치회담에 의한 통일실현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sup>46)</sup> 같은 생각의 발로라 할 수 있다.

광복후 중도우파의 행태를 다른 세력과 보다 잘 구분해주는 것은 바로 이 화합·공존적 자세였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포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는 극단세력에 의해

44) 한 예로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문화인 108인의 성명(48. 4. 14)에서는 단정수립 분단이 ‘동족상잔의 혈투’와 “내쟁같은 국제전쟁이요 외전같은 동족전쟁”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을 본다. 김구도 ‘동포의 지옥행’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자유신문』 1948. 4. 17) 복행을 결의했었다. 좌우분열이 분단과 유혈참극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언은 좌우합작운동기부터 나오고 있었다.

45) 「민족자주연맹 규약·선언·강령·정책」, 한국안보교육협회편 『서울시인민위원회 정당사회단체 등록철』(1990), 772 쪽

46) 백범사상연구소 편, 『백범어록』, 178-179쪽.

기회주의로 또는 우유부단한 것으로 매도되기도 하였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족의 이익을 다른 무엇보다 앞세우는 지순한 민족주의적 사고의 소산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도민족세력의 화합지향윤리는 이데올로기를 절대적 과학으로 보아 그것으로 진리·비진리를 구분하고 적과 동지를 나누는 독선적 자세를 거부한다. 또 특정의 이데올로기에 교조적으로 매달려서 현실을 이해하고 행동방향을 정하는 ‘공식주의’도 거부한다. 이데올로기는 상황과 여건에 맞게 주체적으로 수정돼야 하는 것이며,<sup>47)</sup> 특히 민족적 이익을 위한 합작에 있어서는 양보와 타협에 의해 절충점과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sup>48)</sup> 화합공존의 윤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덕목이었다는 점에서, 중도파의 민족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토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군정이 해방 후의 모든 정치세력이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온건 좌우익(중도파)만이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진보를 이루려 했다고 평가<sup>49)</sup>했던 것은 중도파가 자신의 정책에 협조적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할 것이다.

중도민족세력의 화합중시 민족윤리는 건국의 주도세력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좌익보다는 그 범위가 넓다. 중도민족세력들은 건국의 주도세력을 노동자·농민·소시민·지주·자본가를 포함한 전계층 중에서 친일파를 제외하고,<sup>50)</sup> 진보적 성향을

- 47) 공식주의에 대한 거부는 모든 중도우파 인사들에게서 강하게 표출된다. 특히 안재홍은 그의 「신 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1945) 도처에서 특정의 공식주의·획일주의를 거부하고 止揚·會通하는 융통성과 주체적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안재홍은 그같은 유연성을 ‘人世成敗의 관건’이라고까지 보았으며, 우리 고유정치철학에서는 그같은 사상이 중시되었음을 지적하였다
- 48)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문화인 108인 성명에서는 남북통일을 지상과제로 한 정치적 합작만이 “내 쟁같은 국제전쟁이요 외쟁같은 동족전쟁”의 참극을 막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남북상호의 수정과 양보’의 자세와 ‘자결의 원칙과 공존의 도약’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49) 미군정이 펴낸 『주한미군사』에서는, 모든 정치세력이 ‘민주적 절차’를 외쳤지만 극좌와 극우가 말하는 ‘민주적 절차’(democratic procedure)란 상대방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였다고 비판하면서, 극우는 경찰력과 정부관료의 조종에 의해 그리고 극좌는 계급투쟁과 혁명에 의해 상대를 배제하려 하였다고 평가하였다(U.S. Arm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주한미군사』(돌베개, 1988), 105 쪽)
- 50) 해방 후 정국의 주요 쟁점의 하나였던 친일파 처리문제에 대한 중도우파의 원칙적 입장은 그에 대한 민족정기 차원에서의 분명한 정리·숙정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은 민족적 대단결과 민족역량극대화라는 과제도 아울러 고려하고 있었으며, 그 점에서 우익진영 및 지주세력을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적 판단 하에 친일파청산문제에 강경노선을 걸었던 극좌진영과는 달랐다 할 수 있다.

갖는 가진 세력으로 폭넓게 묶는 경향이 있다.<sup>51)</sup> 이같은 입장은 동맹의 범위를 노동자·농민·도시소시민·근로인텔리 등으로 잡고 그중에서도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혁명의 영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보면서, 친일파·민족반역자와 지주계급을 타도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좌익 조선공산당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다.<sup>52)</sup>

중도우파세력은 건국의 주도세력에 포함되는 자격을 계급적 소속이 아니라 통일·결속이라는 민족적 명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양심과 도덕성 여부에다 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말하는 양심성과 진보성이란 초계급적 국가로의 통일과업에 자기희생을 감수하며 참여하려는 의지의 소유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다. 중도우파의 이같은 입장은 물론 앞에서 말한 계급부재론과도 통하는 것이었다.

중도우파는 좌우합작운동과 남북협상을 통하여 이 화합 지향적 민족주의 윤리를 실천하였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해방공간에서 중도우파 지도자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권모술수를 구사하던 극좌·극우진영 지도자들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는 점이다. 광복 후 정국에서 활동했던 제정과 지도자들의 행태와 리더십을 분석하면 중도와 지도자들이 극좌나 극우쪽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이같은 윤리적 순수성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53)</sup> 그들이 정치에 관여한 것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통일·독립을 성취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 51) 가령 안재홍의 국민당은 지향해야 할 국가를 “모든 진보적이고 반항 침략제국주의적인 지주와 자본가 및 농민·노동자 등 근로층 인민과를 통합한 신민주주의국가”라 규정하고 있으며 『민세 안재홍선집』2, 62쪽), 민족자주연맹도 그 「선언」에서 “모든 애국적인 정당·단체와 개인을 망라하여” 민주주의 민족통일을 완성할 것을 표방하고 있다.
- 52) 참고로 좌우합작운동에 참여한 중도좌파 여운형의 인민당도 반동분자만을 제외하고 노동자·농민·소시민·자본가·지주까지도 포괄한 대중정당을 표방했었고, 백남운의 연합성신민주주의론에서도 일부 자본가·지주의 혁명성을 인정하고 무산계급이 이들 유산계급과 연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도좌파는 노동계급이 혁명과 건설의 중심세력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었다(『몽양여운형선집』1, 246쪽; 백남운, 『조선민족의 진로』(신건사, 1946)).
- 53) 가령 김규식은 자신의 집권을 위한 정당을 조직한 적이 없다. 김구 역시 이승만에게 항상 1인자의 자리를 양보하였으며, 안재홍은 스스로 조직한 정당인 국민당의 성격을 정권을 잡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계몽을 위한 조직이라 강조했다.

## 2. 민족자주론

중도우파세력의 민족주의 노선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들이 시종 강하게 견지하였던 민족자주론이다. 중도파의 민족자주노선은 중도파연합기구인 민족자주연맹의 강령에 잘 표명돼 있다. 강령에서는 “일체의 사대적 의타성을 청산하고 민족적 자부심과 국가적 자주의식을 고취하여 자력건설에 노력하자”고 다짐하고 있으며, 국가건설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를 조선화 해서 오직 조선의 현실이 지시하는 ‘조선적인 민주주의’를 건립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sup>54)</sup> ‘민족자주연맹’이란 이름에는, 미소의 냉전대립에 휘말리지 않고 민족의 자주적 판단과 행동에 의해 민족의 통일독립을 이루어내자는 의지가 반영돼 있었다 할 수 있다. 김구도 자신의 유일한 소원을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라 천명하고, 그같은 과업을 인류에 대하여 우리민족이 담당해야 하는 최고의 임무라고까지 강조했다.<sup>55)</sup>

이 민족자주론은 중도우파가 가지고 있던 민족중심적 세계관의 산물이기도 하고, 반제·자주독립을 추구하던 한말 이래 민족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미소 양진영중 어느 하나에 의지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중도파들은 현실주의적 외교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국제정치는 결국에는 국제법이나 도덕규범보다도 힘의 세기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약소국인 조선이 생존하고 자주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간에 세력균형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았고, 양진영으로부터 중립적인 위치에 섬으로써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sup>56)</sup> 이같은 국제관계인식은 친미나 친소의 성향을 명확히 가지고 있었던 극우나 극좌와는 명백히 다른 것이었다. 중도우파는 미소간의 냉전이 자칫하면 약소국 조선을 민족상잔의 와중으로 몰아넣을 것이라 걱정하기도 하였다.

좌우합작운동이 미소공위를 통한 건국을 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자주 의지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안목과 유연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좌우합작에 참여했던 중도파들은 민족 내적 역량이 미숙한 상태에서 외세와

54) 「민족자주연맹 규약·선언·강령·정책」, 『서울시 인민위원회 정당사회단체 등록철』 772 쪽

55) 김구, 「나의 소원」, 『백범일지』.

56) 이같은 입장이 개진된 글로는 안재홍, 「미소공위와 조선인의 태도」, 『민세안재홍선집』2, 189쪽을 들 수 있다.

무작정 대립해서는 통일독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같은 현실 인식에 입각하여 외세를 이용할 줄 아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했던 초기 중도우파들은, 한민족이 자력에 의해 해방을 성취하지 못했고 미소 양대국이 남북을 점령한 채, 이해관계를 다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맹목적인 외세배척은 현명치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소공위에 협조하여 통일건국을 이루는 차선책을 선택하였다. 김규식과 안재홍 등 합작·통일세력이, 모스크바결정의 신탁통치론에 무조건 반대했던 한민당·한독당과는 달리, 일단 미소공위에 참여하여 임시정부부터 이루어낸 뒤에 민족적 의지를 모아 대처하는 국제협조노선을 폈던 것은 이같은 유연성의 산물이었다 하겠다.

한편 미소공위가 결렬되는 등 미소간의 대결이 심해지면서 미소협조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자, 중도우파는 통일독립을 위한 최후의 시도로서 다시 민족자주의 기치를 들고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의 협상을 추진하였다. 남북협상은 물론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기만당하기만 한 채,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지만, 그러나 남한 내 통일민족주의의 민족자주 입장을 잘 드러내주었다.

이 민족자주노선은 외래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라 조선의 특수사정과 과제 및 전통에 맞는 사상에 대한 모색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민족자주연맹에서는 ‘조선적 민주주의’라는 논리로 나타났는데, 조소앙의 삼균주의나 안재홍의 신민주의 등에서도 이같은 문제의식은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다. 이 ‘조선적 민주주의’론은 민족자주노선의 대내적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외래의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여 조선의 현실에 적용하는데 반대하고, 우리가 입각해야 하는 사상은 조선의 전통과 현실여건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도우파는 특히 민족이 지향해야 할 대안적 사상을 고유사상이나 역사경험에서 찾아내려 하였고, 그 사상적 정당성을 민족사의 발전과정에서 확보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sup>57)</sup> 고유적 전통과 토대에 대해 관심을 둬으로써 중도우파는 그 사유의 폭을 한층 더 넓힐 수 있었다.

57) 가령 조소앙이 삼균주의의 민족사적 근거를 『신지비사』나 홍익인간이념에서 찾은 것이라든지, 안재홍이 그의 신민주의의 원리를 고유의 ‘다사라 정신 같은 고유의 조선철학에서 찾은 것이 그 대표적 예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 VI. 중도우파 사상의 성격과 의의

### 1. 근대 한국정치사상사 속에서의 위치

이상에서 해방 후 중도우파세력이 가졌던 정치사상을 통일지향 민족주의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장에서는 이들 사상이 가지는 성격과 의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먼저 근현대 한국정치사상사 속에서 이들 사상이 가지는 위치와 특징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지적할 것은, 이들 사상은 한말 이후의 한국정치사상사, 특히 근대 한국민족주의의 정치사상적 발전과정 속에서 볼 때, 이상적 민족국가 모습에 대한 한국 지성의 모색작업이 도달한 하나의 결론이었다는 점이다. 한말 개화운동 이래 독립협회, 신민회운동을 거쳐 삼일운동, 상해 임시정부로까지 이어져오는 일련의 민족운동은, 한국민족주의가 그 공동체의 내적 질서를 군주제적·귀족중심적인 것으로부터 ‘만민의 공산’으로의 국가로 (곧 민주공화국)<sup>58)</sup> 바뀌어가는 과정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임시정부가 채택한 민주공화제적 국가구상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반성이 곧바로 생겨났으니, 1920년대에 들어 공산주의와 같은 새로운 사조가 유입되면서, 사회경제적 평등과 복지의 문제도 정치적 자유·평등의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이 새로이 각성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념적·계급적으로 분열된 독립운동진영을 통합하고, 그 결속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이론’<sup>59)</sup>을 제시해야 했다.

이런 과제에 부응하여 한국민족주의는 민족가치의 최고성을 고수하되 민주주의와 함께 사회적 평등과 복지문제도 강조하는 새로운 사상적 대안을 모색하게 된

58) ‘만민의 公産’이란 말은 한말에 신채호가 사용한 용어이다. 「독사신문」(1908), 『개정판 단재신채호전집』상, 482쪽

59) 이 ‘중심이론’의 필요성을 역설한 글로는 「中國抗戰第5年 告! 國內外同志同胞書」(1941), 유광열 편, 『항일선언·창의문집』(서문당, 1975), 262쪽 등을 들 수 있다. 한독당 중앙집행위원장과 임시정부주석의 공동명의로 발표된 이 성명에서는 이 ‘중심이론’이 정립되지 않아서 그동안의 항일전선이 좌우로 방황하며 단합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수립되었다고 단언한다. 성명에서는 자주독립의 ‘민족적 정관’만으로는 안되고 ‘국민경제의 합리화’까지도 포함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데, 성명이 말하는 ‘중심이론’은 삼균주의 이론이었다.

다. 이 무렵의 한국민족주의의 정치사상적 성격은 앞 시대의 ‘시민적 민족주의’와 구분하여 ‘사회적 민족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sup>60)</sup> 1920년대 이후 민족운동진영에는 삼균주의(조소앙)나 신민족주의(안재홍)·대공주의(안창호)·삼본주의(신숙)·불교사회주의(한용운) 등의 이름 하에 다양한 이론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들 이론은 모두 한국민족주의의 다음 단계 과제에 부응한 사상적 대안으로서 제시된 이론들이었다 할 것이다.<sup>61)</sup> 한국민족주의 운동의 이같은 사상적 전환은 근대기 이래 이상적인 민족국가의 모습을 추구해온 민족주의자들의 노력이 도달한 하나의 결론이었다 할 수 있다. 1920년대 이래 좌우합작·유일당운동·민족협동전선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이같은 사상적 발전에 힘입은 것이며, 이 논문이 논의한 해방 후 중도민족세력의 사상 또한 그 연장선 상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중도와 지도자들의 사상이 그 정책지향에 있어 서로 유사한 것은 이같은 배경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주창자들 역시 그 유사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같은 인식에 토대하여 우익정당 통합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sup>62)</sup>

다음으로 살필 것은 해방공간에 활동하던 다른 정파들의 사상과의 차이점이다. 중도우파의 정치사상은 해방공간에서의 극좌나 극우노선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극좌와 극우의 이데올로기는 각기 공산주의와 반공주의로 요약할 수

60) 여기에서의 ‘시민적 민족주의’와 ‘사회적 민족주의’는 E. H. Carr가 말한 근대 민족주의의 발전 과정 중 제2단계와 3단계, 곧 ‘민족주의의 민주화’ 단계와 social nationalism(복지형 민족주의 단계)에 상응한 개념이다. 3단계의 사회적 민족주의는 기존의 시민적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소외되어 있던 민중계층까지를 포함하여 국민통합을 달성해가던 복지국가지향시기의 민족주의를 가리키는데(E. H. Carr, *Nationalism and After*, London: Macmillan, 1968, pp. 8~9), 이는 J. S. 샤피로가 말한 자유주의 발전의 3단계와 비교하면 그 마지막 단계인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단계에 상응하는 민족주의이다.

61) 안창호의 大公主義에 대해서는 유병용의 「한국의 중도와 정치사상에 대한 일고찰: 안창호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9집 4호(1995)를 참조할 것. 한용운의 불교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차기벽, 「한국민족주의의 정치사상」, 진덕규 편, 『한국의 민족주의』(현대사상사, 1976) 참조. 신숙의 三本主義에 대해서는 신숙, 『나의 일생』(일신사, 1956) 참조.

62) 안재홍의 국민당과 김구의 한독당이 통합(1946. 9)된 배경에는 이같은 이념적 동질성에 대한 인식이 기반 되어 있었다. 안재홍은 삼균주의에서 말하는 균지·균부·균권의 삼균제도는 신민족주의의 기본요소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신민족주의는 ‘자본적 민주주의’에 대립하여 균등·공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주의로서, 이 삼균제도는 이같은 신민족주의의 실천원리 혹은 정책으로서 타당하며, 양자는 서로 표리의 관계를 가진다고 말하였다(안재홍, 「역사와 과학과의 신민족주의」, 『민세안재홍선집』 2, 230~232 쪽).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극우의 반공주의는 자본주의 질서를 지향·선호하고 있었다. 양자 역시 모두 민족을 언급하였지만 그들이 추구한 민족가치는 이같은 좌파의 이념적 전제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또 그를 누가 먼저 유발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독선적·배제적 자세에 있어서는 공통적이었다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같은 태도는 좌우합작을 통하여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방지해야 한다는 민족적 과제와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극좌와 극우에게는 공히, 좌우대립과 미소대결의 와중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의 독립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빈약했으며, 탈냉전·민족자주의 ‘조선적 민주주의나 초계급적 국가관 같은 지향이 존재하지 않았다 할 수 있다.

중도우파의 정치사상은 중도좌파와의 사이에도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운형 등의 중도좌파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로부터 시작하여 통일이라는 민족주의적 과제 쪽으로 접근해온 세력이었다. 중도좌파는 통일국가 건설과제를 중시하여 좌우합작운동에 합류하였지만,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최종적 목표로 간주하고 민족통일보다 사회혁명을 더 중시한 흔적이 짙다. 중도좌파의 건국론은 그 주도세력을 설정함에 있어 자산계급과의 연합을 추구하였지만 무산계급의 영도성을 포기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통일민족국가 건설과제를 위하여 막스레닌주의의 일반이론이나 경험을 나름대로 수정하려 하였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당위성을 분명히 제시하지도 않았다. 중도좌파의 이같은 측면은 단순한 전술적 변신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유연성의 강도만큼 민족주의가 살아날 수 있었다. 중도좌파는 그 구심점인 여운형이 암살된 후, 북쪽 정권에 참여하였던 백남운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점차 막시즘과의 차별성을 자각해가면서 민주사회주의적·중도우파적 노선으로 전회하게 된다.<sup>63)</sup>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이들 사상이 한국정치가 추구해야 할 ‘자아준거적 정치이론<sup>64)</sup>의 선구적 사례라는 점이다. 정치제도와 사상은 그 사회의 현실과 과제에 즉

63) 가령 민전과 근로인민당 및 남북협상에 참여하였지만 남쪽에 잔류하여 활동한 장건상이나 김성숙 등에 대해서는 이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도좌파의 사상에 대해서는 정영훈, 「광복후 중도좌파의 정치사상」, 『정신문화연구』 제21권 제4호(1998)을 참고할 것

64) 구범모, 「한국적 사상정립과 정치학」, 『한국의 정치와 경제』 제4집(정신문화연구원 1993), 136쪽

응하여 설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같은 요구는 모든 정치사상적 사유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외래적 이론을 무비판적·공식주의적으로 수입·적용한다면 그것은 몰주체·현실피리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대 한국정치사상의 모방성·비주체성·차용성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지만, 중도민족세력의 사상은 이같은 일반적 특징으로부터 예외적 존재라 할 수 있다. 특히 중도파 사상에서 보이는 ‘조선적’이라는 문제의식은 사상의 자주성·토착성·현실성·유연성을 강조한 명제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 사고의 산물이겠지만 이후 한국에서 전개됐던 한국적·조선적·고유적인 것을 표방하는 숭한 정치적 사유들의 선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2. 20세기 세계 정치사 속에서의 의의와 한계

다음으로 살필 것은 서구 정치사상사의 제 조류들과의 비교 및 전후의 세계정치사 속에서 가지는 위치에 대한 것이다. 해방 후의 중도파는 서구 근대사 이래 이어오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의 한가운데에 서있었다. 2차대전후에는 이 두 조류가 미·소라는 두 강대국의 주도하에 세계를 두개의 진영으로 재편해가고 있었다. 이른바 냉전이 시작된 것이며, 한국의 분단도 냉전의 외중에서 결과된 것이었다. 중도우파가 고민한 것은 바로 이 세계사적으로 전개돼온 냉전을 어떻게 극복하고 민족적 자주독립과 통일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으며, 그 냉전에 대한 외교적 대안이 바로 ‘민족자주노선’이었고 그 사상적 대안이 ‘조선적 민주주의’였던 셈이다.<sup>65)</sup> 한국정치사를 통하여 이같이 ‘거창한 문제들과 씨름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놓은 것은 흔치 않은 예가 아닌가 한다. 자본주의적 발전논리와 공산주의적 발전논리를 아울러 거부하며 냉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한국적인 길을 찾으려던 중도파들의 노력은, 전후 제3세계 국가들이 추구하던 ‘자민족중심적’ 발전이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으며, 시간적으로 보아서는 그 선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할 수 있다.<sup>66)</sup>

65) 안재홍은 자신의 신민족주의론을 ‘미소 양대국에 의해 대표되는 양대 주의를 지양·종합한’ 창의적 신주의’라 자임한 바 있고, 조소앙의 삼균주의 역시 양대 이데올로기의 대립 외중에서 생겨난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의 대결을 해소할 제3의 이념임을 각성했었다.

중도우파의 좌우합작노선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입장은 서구의 민주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노선과 가까웠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sup>67)</sup> 서구의 민주사회주의는 자유자본주의와 전체주의적 공산주의가 가지는 모순에 대한 제3의 대안으로서 제기되어 발전해왔는데, 중도민족세력이 제안했던 정치노선은 여러 면에서 서구의 민주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바와 유사함을 부정할 수 없다.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라든지, 사회주의 원리에 집착하지 않고 환경여건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기본입장, 계급정당 아닌 대중정당을 표방한 점 등이 그러하고,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사회복지정책 등 여러 부문의 정책구상들에 있어서도 상통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도적 민족주의자로 지목한 인사들은 서구의 비공산주의적 민주사회주의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그와 교류하며 영향받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균주의를 제시한 조소앙인데, 그는 특히 영국 노동당의 사회주의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68)</sup> 안재홍도 노동당이념을 자주 거론한 바 있으며, 중도좌파의 지도자였던 여운형 또한 영국 노동당의 좌파 노선에 공감을 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sup>69)</sup> 이들은 독립운동에 전념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66) H. J. 위아르다는, 전후 제3세계국가들 사이에는 미소간 냉전의 외중에 휘말리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유럽의 역사적 전통에 토대하여 형성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같은 유럽적 발전모델을 자국의 사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울러 거부하고 각국 나름의 전통과 여건에 맞는 토착적인 모델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자민족중심적 발전이론’(ethnocentric theory of development)이라는 이름하에 논의한 바 있는데, 민족자주의 구호하에 ‘조선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던 광복 후 중도파들의 노력에서도 같은 경향이 찾아진다 할 수 있다(Howard J. Wiarda, “Toward a Nonethnocentric Theory of Development: Alternative Conceptions from the Third World,” H. J. Wiarda, ed., *New Directions in Comparative Politics*, Colorado Boulder: Westview Press, 1985, pp. 127-150).

67)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역사비평사 1991), 570 쪽 강만길 「좌우합작운동의 경위와 그 성격」, 『한국민족운동사론』(한길사, 1985), 65쪽. 이들 논자들은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사회민주주의를 맑시즘에 대한 수정이론으로의 독일 사회민주당류의 이념으로 보고, 민주사회주의는 페이비어니즘류의 비맑시즘적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면, 중도좌파의 그것은 사회민주주의와 중도우파의 그것은 민주사회주의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68) 조소앙은 1917년 제2인터내셔널과 접촉을 시도한 이래, 1919년에는 제네바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준비회의와 로테르담에서 열린 국제사회당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한국 독립과 관련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하였다(홍선휘, 『조소앙사상』(태극출판사 1975), 49~52 쪽 참조).

정치이념을 정립해야 한다는 과제와 관련하여 선진 제국에서의 정치사상과 이념의 변천동향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며,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민주사회주의의 대안을 참고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중도우파 사상이 가지는 성격과 의의를 살펴보았지만, 그러나 중도우파의 구상은 해방공간에서는 실천되지 못하였다. 중도파운동의 실패는 통일민족국가틀 세우지 못한데 그치지 않고 중도파적 사고와 세력까지 몰락시키는 극한 상황을 결과하였다. 남북에 들어선 극좌·극우 정권은 양자간의 중도적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중도파의 주요 지도자들은 극단세력들에 의해 암살당하였거나 전쟁 중에 납북되었다.<sup>70)</sup> 중도파의 정치사상은 그 통일운동의 실패로 인하여 그 이상을 적용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건국 후 ‘혁신계’로 불리는 진보세력들이 그 유지를 계승하여 실천하고자 하였으나<sup>71)</sup> 냉전의 거센 바람은 그들에게 이상을 실천할 여건을 허용하지 않았다.

중도우파가 제기한 대안들은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가령 이들이 각 세력들에게 호소한 민족적 양심과 양보·타협의 자세는 현실적 이해관계에 몰두하고 있던 현실주의적 정객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었다. 또 친일파·민족반역자만을 제외한 전인민의 연합을 주장한 이들의 노선 또한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상에 그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보아 각 계급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약속해주는 세력에게 지지를 표명했지 민족적 양식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론상 이들의 지지기반이어야 할 소시민·중산층의 세력은 아직 중도파운동을 튼튼히 뒷받침해줄 정도로 두터운 것이 아니었다. 중도파운동(좌우합작운동)에 대한 미군정의 지지가 철회되자 이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내적 세력은 크지 않았다.<sup>72)</sup>

69) 이동화, 『8.15를 전후한 여운형의 정치활동』,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한길사 1980).

70) 김구와 여운형은 암살되었다. 그리고 김규식·안재홍·조소앙·원세훈·명제세·윤기섭·조완구 등은 전쟁 중에 납북되어 정치무대에서 사라졌다. 홍명희·이극로 등 중도좌파 진영에 가깝던 인사들은 월북하여 북쪽 정권에 참여하였지만 김일성의 독재가 강화되면서 권력에서 밀려났다.

71) 좌우합작·남북협상을 지지·참여했던 중도파는 단정의 참여를 거부하였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수립을 차선책으로 받아들이고 정계에 참여하면서 진보적 민족주의세력으로서의 ‘혁신계’를 형성하였다.

72) 해방 후 한국정치는, 민족적 대의명분에 백의종군하는 ‘도덕성’과, 현실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조직화하는 ‘정치력’을 아울러 갖추고 있는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었다 할 수 있다. 전자만으로는

## VII. 맺음말

해방 후 한국정치에 부과된 가장 중요한 과제를, 계급적·사상적 분열과 정치세력간의 대립을 극복하여 통일민족국가를 성사시키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방지해야 했던 데서 찾는다면, 이러한 민족적 과제에 가장 적극적이고 헌신적 자세로 임했던 세력은 좌우합작운동과 남북협상을 주도한 중도우파 세력이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극좌와 극우는 합작과 통일을 거부하고 독선적 이데올로기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관철해갔으며, 중도좌파 역시 한때는 합작과 통일운동에 참여하였지만 중국에는 통일보다 계급혁명을 우선시하는 극좌진영으로부터 독자성을 고수하지 못하고 합작운동과 통일전선으로부터 이탈하였다.

그러나 중도우파의 통일민족주의는 역사의 추이가 보여주듯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서로를 인정치 않는 극단세력들이 남북을 장악한 분단으로 나타났고, 서로를 인정치 않는 두 정권의 대결은 독선적인 패권의식과 결합하면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귀결되어 갔다. 전쟁은 한민족 성원 전체의 1/6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산업생산시설 대부분을 파괴시키는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도 종전 아닌 휴전이라는 이름으로만 종료되었다. 그리고 전쟁과 대결과정에서 남북에 형성되고 강화된 냉전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정치질서는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날 까지도 한반도 남북의 정치와 사회·문화를 지배하면서 정치발전과 통일과제의 진전을 방해하며 민족의 운신을 제약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해방공간의 중도파 중에서도 특히 중도우파세력이 가지고 있던 정치사상을 통일지향 민족주의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중도우파 인사들은 좌우대립이 동족상잔의 참극을 불러올 것이라는 위기의식 하에 합작과 통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상적 대안을 모색하였고, 스스로 그같은 정치이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우선 민족을 계급보다 우월한 영속적인 가치로 보는 세계관에 입각하여 문제에 접근한다. 안으로는 민족을 상위가치로 전제한 토대 위에 내부의 갈등들을 수렴하여 통합을 이루고, 밖으로는 민족단위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가운

---

공허하거나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후자만으로는 권력만을 추종하는 마키아벨리즘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결과를 두고 볼 때, 중도파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후자요소가 취약한 미흡한 것이었다는 평가가 불가피할지 모른다.

데 민족국가간 공존과 평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국가조직원리나 도덕적 규범에 대한 모색도 있었다. 그들은 특정계급의 독주를 배제하고 전체 민족성원의 복지를 도모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평등이라는 요소를 중시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창의력 또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초계급적 국가구상을 제시하였다. 또 통일을 위해서는 폭력적 수단을 배제하고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공동운명체로의 동포의식에 토대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협동·공존의 윤리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외세에 추종하지 않고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활로를 개척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정 이데올로기의 공식에 휩쓸리지 않고 조선의 상황과 경험 및 과제에 합치되는 조선적 길을(조선적 민주주의) 찾아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대안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와 관련하여 고민해온 오랜 지적 성찰의 산물이었다. 이들의 민족주의는 민주적 민족주의 단계를 지나 사회적 민족주의 단계의 사상적 성격을 가지며, 이상적 민족국가모형을 추구해온 한말 이래 지식계의 사상적 모색작업의 한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적 제1세계와 사회주의적 제2세계의 대결에 휩쓸리지 않고 자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모색해간 전후 제3세계의 사상적 경향과 상통하며, 시간적으로 볼 때는 그 선구적 사례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는 각종의 정책대안들은 제2인터내셔널 계통의 서구 민주사회주의의 그것과 많이 닮아있다.

이들의 실천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견지하고 제시한 관점과 아이디어들 가운데는 시대를 초월하여 의미 있는 대목이 작지 않은 것 같다. 가령 조선이라는 구체적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조선의 경험 및 유산에 토대한 이론을 강조한 점이라든지, 외래의 이론에 맹목적으로 경도되는 공식주의를 배격한 점 등은 우선 지적할 수 있는 대목들일 것이다. 또 특정계급의 국가가 아닌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복지를 강조하는 전민적·초계급적 국가에 대한 아이디어와 평등을 중시하되 국가계획에 의해 자본과 노동을 결합하여 최선의 생산성을 확보하자고 하였던 경제관련 구상들도 국민통합이라는 과제에 접근함에 있어 참고해야 할 관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당시 정치주체들에게 촉구하고 스스로 실천하였던 양보·공존·협동의



윤리 역시 중요한 메시지이다. 독선과 독점욕이 횡행하고 권력 장악을 위한 대결과 갈등만이 보이는 오늘날 정치세계의 행태는 권력이나 지위에 초연한 채 민족적 명제들에 충실하였던 중도우파의 헌신적 자세를 돋보이게 한다. 이들이 민족의 혈통은 영원하다고 갈파하면서 민족은 어떤 초민족적인 관념조작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실체라 본 것도 인간본성의 진실과 세계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관점이라 생각된다. 이들이 이같은 민족중심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세계인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일가를 꿈꾸는 것은, 한국의 민족주의가 결코 편협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중도우파(중도민족세력)가 걸었던 정치적 궤적과 그들이 남긴 사상적 편린들은 한국정치사와 사상사 속에서 볼 때 여러 면에서 돋보이는 것 같다. 그들의 정치적 구상과 계획이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그러나 그 실패의 원인은 사상 자체의 취약성에 있었다기 보다는, 그들의 이상주의와 순수성을 거부한 권력지향적이며 탈민족주의적인 극단세력들과 냉전이라는 국제환경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들 중도우파의 사상을 통일지향 민족주의라는 제한된 관점에 입각하여 통괄적으로 더듬는데 그쳤거니와, 개별 인물들의 사상과 구체적 사안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은 다른 자리로 미루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만길, 『한국민족운동사론』, 서울: 한길사, 1985.
- 구범모, 「한국적 사상정립과 정치학」, 『한국의 정치와 경제』 4집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국사편찬위원회 편, 『자료대한민국사』 1~7. 과찬 국사편찬위원회, 1970~1974.
- 김구, 『백범일지』(1947). 서울: 서문당, 1973.
- 김남식·심지연 편, 『박헌영노선비판』, 서울: 세계, 1986.
-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편, 『백범 김구: 생애와 사상』, 서울: 교문사 1982.
- 몽양 여운형선생 전집발행위원회 편, 『몽양여운형전집』, 서울: 한울, 1991.
- 민족자주연맹, 「민족자주연맹 규약·선언·강령·정책」(1948). 한국안보교육협회 편 『서울시민민위원회 정당사회단체등록철』, 1990.

- 배성룡, 『자주조선의 지향』. 서울: 광문사, 1948.
- 백남운, 『조선민족의 진로』. 서울: 신건사, 1946.
- 백범사상연구소 편, 『백범어록』. 서울: 서문당, 1973.
- 삼균학회 편, 『소양선생문집』. 서울: 햇불사, 1979.
-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1.
- 손진태, 『조선민족사개론』(1948). 『손진태선생전집』 1권, 서울: 태학사, 1981.
- 송남현, 『한국현대정치사』 1. 서울: 성문각, 1980.
- \_\_\_\_\_, 『시베리아의 투사: 원세훈』. 서울: 천산산맥, 1990.
- 신 숙, 『나의 일생』. 서울: 일신사, 1956.
- 신채호, 『독사신문』(1908). 『개정판 단재 신채호 전집』 상.
- 심지연, 『미소공동위원회 연구』. 서울: 청계연구소, 1989.
- \_\_\_\_\_, 『인민당연구』. 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1.
-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편, 『민세 안재홍 선집』 2. 서울: 지식산업사, 1983.
- 양호민, 「한국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양호민 외, 『한국민족주의의 이념』. 서울: 아세아정책연구원, 1977.
- 우남실록편찬위원회 편, 『우남실록 1945~1948』. 서울: 열화당, 1976.
- 유병용, 「한국의 중도파 정치사상에 관한 일고찰: 안창호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9집4호,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5.
- 윤민재, 『한국의 현대국가형성과정에서 중도파의 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이동화, 「8.15를 전후한 여운형의 정치활동」.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서울: 한길사, 1980.
- 이정식, 『김구식의 생애』. 서울: 친구문화사, 1974.
- \_\_\_\_\_, 「1948년의 남북협상」. 양호민 외, 『민족통일론의 전개』, 서울: 형성사, 1984.
- 임종철, 「통일한국의 경제체제와 산업구조」.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정세현, 「통일한국의 체제와 이념적 지향」.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정영훈, 「광복후 중도민족세력의 정치사상」. 『한국의 정치와 경제』 5집.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_\_\_\_\_, 「한국사 속에서의 단군민족주의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28집 2호, 1994.
- \_\_\_\_\_, 「광복후의 중도파와 통일운동」. 『한국의 정치와 경제』 7집,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_\_\_\_\_, 「근대 한국 민족주의의 정치사상」. 『한국의 정치와 경제』 9집,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_\_\_\_\_, 「한반도분단의 민족내적 원인」. 『정신문화연구』 제21권 제2호, 1998.

\_\_\_\_\_, 「광복후 중도좌파의 정치사상」. 『정신문화연구』 제21권 제4호, 1998.

진덕규 편, 『한국의 민족주의』. 서울: 현대사상사, 1976.

하일식 편, 『백남운전집』. 서울: 이론과 실천, 1991.

홍선희, 『조소양사상』. 서울: 태극출판사, 1975.

Anderson, B.,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Carr, E. H., *Nationalism and After*. London: Macmillan, 1968.

Wiarda, H. J., "Toward a Nonethnocentric Theory of Development: Alternative Conceptions from the Third World." H. J. Wiarda, ed, *New Directions in Comparative Politics*, Colorado Boulder: Westview Press, 1985.

Schapiro, J. S., *Liberalism: Its Meaning and History* (1958). 민석홍 역, 『자유주의』. 서울: 문명사, 1972.

U.S. Arm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주한미군사』. 서울: 돌베개, 1988.

● 투고일 : 2004. 11. 1

● 심사완료일 : 2004. 11. 24.

● 주제어(keyword) : 통일민족주의(integration nationalism), 한국정치사상(Korean political thoughts), 한국민족주의(Korean nationalism), 좌우합작운동(left-right wing cooperation movement), 남북협상운동(south-north integration movement), 통일운동(integration movement), 김구(Kim-gu), 김규식(Kim-gyusik), 안재홍(An-jaehong), 조소양(Jo-soang).